

# “주민·지방의회 중심 새 지방자치 패러다임 열겠다”

## 전남매일-대신협 공동인터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올해 31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뒤 30년 만인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재개됐다.

지난 31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로 지방의회의 위상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대신협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자치분권 2.0의 의미는.

▲ ‘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었다.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제·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자치분권 2.0 시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자치분권 2.0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은.

▲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

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협력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경우, 정부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 비수도권 상호 연계·협력 행·재정 역량 결집 자치경찰제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 제도 정착 지역언론 감시·견제 역할 최우선

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개발원 내에 지방의회정우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지만, 주민들은 체감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 현행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해당한다.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경찰 인력 이관 없이 기존 현장경찰관들이 경찰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체계로, 아직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주민 생

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융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시행되면 주민들께서도 자

치경찰제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향후 자치분권이 나아가 할 방향은.

▲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협력 저하 등 지역사회 복잡 문제를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는 전국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선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 자치분권으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이 주어지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행사하고 있는지 잘 살피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참여다.

지역 언론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주민의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감시·견제자로서,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강병은 기자

## 꿈 이루는 청년도시 조성사업 추진

### 시, 일자리 등 5개 분야 84개 사업 1,718억 투입 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정책특별보좌관 신설

광주시가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718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4개 청년사업이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지역기업과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한다. 특히 기존 ‘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을 세분화해 단기 일경험을 정규직 전환과 창업지원으로 연계하고, 일경험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도모한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소통의 폭을 넓힌다. 지난해 구축한 ‘청년정책 플랫폼’도 본격 운영하며, 광주시는 물론 자치구, 국가 청년정책을 검색해 참여를 신청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을 확대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새로 채용하는 청년인건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청년고용을 촉진한다. /오선우 기자

복지·문화분야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마인드링크’ 사업을 확대하고, 광주청년센터가 마음건강 상담소 운영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 정신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활동비와 교육비 등 1,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활동역량 강화와 영역 확대를 꾀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꾸고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민주, 민감룡 전 경찰청장 선대위 영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안전사회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인제영입식을 열고 민감룡 전 경찰청장 등 9명을 안전전문가로 영입했다.

민전 청장 외에 신열우 전 소방청장, 조종목 전 소방청장, 김재규 전 전남지방경찰청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진정무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김동현 전 국

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박정용 전 광주전남소방본부장, 김충규 전 남해지방해경청장 등도 합류했다.

조종목 전 소방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 경찰, 해경의 안전을 위해 이 재명과 함께 지금보다 더 나은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감룡 전 경찰청장은 “안전은 국민 생활의 토대”라며 “이런 소명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경찰, 소방, 해경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혜자, 이재명 교육대전환위 부위원장 임명

박혜자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11일 지방 정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역임한 박 전 국회의원이 디지털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책임자로 보고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박 전 의원은 광주대성초·전남여중·전남여고, 이화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을 역임했다. 박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나라 기자

CHARM HEALING SCALP CARE SOLUTION

참힐링

# 탈모 포기하셨다구요? 불만족시 환불해드립니다

두피·탈모 케어 솔루션  
모링가환 | 모링가샴푸 | 은갈사بت

NAVER 참힐링 모링가 샴푸 검색하세요

두피케어상담·체인점상담  
**1588-7438**